



보도시점 2025. 12. 10.(수) 10:00 배포 2025. 12. 9.(화)

해상풍력 2030년까지 연간 4GW 보급 기반 구축한다... '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' 발표

-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
- 기반시설 확충으로 2030년 누적 10.5GW(보급착공), 2035년 누적 25GW 이상(보급) 추진
- 발전단가(kWh) 단계적 인하로 2030년 250원, 2035년 150원 이하 목표
- '해상풍력발전추진단' 연내 조기 출범, 인허가 밀착지원·사업기간 단축
- 20MW급 국산 터빈 개발, 부유식 기술 실증, 지역상생·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

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·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12월 10일 오전 '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(TF)' 2차 회의를 이룸센터(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)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'해상풍력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 및 보급 계획'을 발표한다.

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, 국방부,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·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,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/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.

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, 금융 조달 애로, 복잡한 인허가,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.35GW 수준(2025년 기준)에 머물러 있다.